

왜 大學教育 投資에 인색한가

全 成 連
(高麗大 教育學科)

우리나라의 高等教育은 선진국형의 量的 構造와 후진국형의 質的 構造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전반적으로 落後와 矛盾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 인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매 5년마다 배로 늘어남으로써 세계에서 그 類例가 없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수는 인구비로 따져 볼 때 세계 3위, 남자만으로 따질 때는 세계 1위이다. 고등교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기간중 교육 여건은 별로 개선된 것이 없어서 전반적인 敎育의 質은 落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네스코에서 발간된 세계 통계 자료집은 한국 고등교육 구조의 矛盾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인구와 그 증가율은 세계 최고인 데 반하여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세계 최하위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 18명, 영국 13명, 그리고 일본이 10명 선이다. 아시아권에서도 말레이지아 14명, 인도네시아 13명 등에 비하여도 월등하게 많고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27명보다도 많다.

교수 1인당 42명은 국내의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 보아도 뒤떨어지는 조건이다. 같은 유네스코 통계에 우리나라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7명, 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명으로 되어 있다. 初·中等學校에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대학 여건은 매우 열악함이 나타난다. 지식의 전수만이라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아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식의 전수뿐만 아니라 지식의 創造, 그리고 敎授와 學生 사이의 인격적인 접촉을 매우 중시하는 현대 교육에 있어서 敎授와 學生比는 대학교육의 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指數가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일관된 高等教育 政策의 不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 정책이 독자적인 論理와 原則을 갖지 못한 채 국가의 다른 정책에 그때 그때 상황적으로 예측되어 집행됨으로써 신뢰를 잃었고,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교육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이다. 이들 정책에 감추어진 공통적인 특징은 대학에 대한 엄격한 中央統制方式의 강화이고, 대학을 도와주는 助長 기능은 찾아 보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해방 45년 동안에 고등교육에 대한 文教政策의 가장 큰 失策 하나를 든다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敎育立國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 총 생산 증 공교육비

의 비율은 최근에는 4.5% 수준에 다달았는데, 이것도 선진국이나 우리의 경쟁 국가와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편이다. 거기에 이 공교육비가 학교급 간에 배분되는 비율을 보면 우리의 역대 정부가 얼마나 고등교육에 무심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비를 초등교육에 45.2%, 중등교육에 38.6%, 그리고 고등교육에는 10.3%를 配分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高等教育에 公教育費를 배분하는 비율과는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카나다는 28.8%, 미국은 38.3%, 그리고 일본도 21.4%를 配分하고 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더 적은 고등교육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등교육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강의 시설, 실험·실습 시설, 도서관 시설, 기숙사, 체육 시설 등 시설 쪽을 보면 우리의 낙후 정도는 더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시설은 국·공립대학보다도 사립대학 쪽이 훨씬 더 落後되어 있다. 大學을 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私立大學에 대해서는 統制는 하되, 일체 支援은 하지 않는 고등교육 체제도 전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특유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교적 짧은 한국의 고등교육사에 있어서 私立大學의 공헌도는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란 점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私企業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이나 저축으로 형성된 公金融을 공급해 주고 지원해 줌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 준 정부의 아량있는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公共性이 더 큰 私立大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엄격히 구분하여 차등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도록 한 데에는 사립대학 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私立大學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대학이 추구해야 할 엄격한 도덕성과 자율 규제 능력이 상실된 예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고, 최근의 대학 사태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본다.

私學에 대한 이와 같이 좋지않은 인상이 정부가 사학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 사학에 대한 입법부 관계자들과 정부 관리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징후가 발견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임원과 대학 총·학장들의 꾸준한 설득에 힘입어 금년에 고등교육 사상 처음으로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私立大學들이 政府로부터 직접적인 財政支援을 받게 되었다. 초년도의 액수 그 자체는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政府의 私學支援에 대한 先例를 남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노력과 정부의 인식 변화로 인해서 私學에 대한 政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문교부는 앞으로 5년간 私立大學 연간 운영비의 10% 수준(2,000억 원)을 財政支援해 줄 것을 공표한 바 있다. 10%라는 것도 선진국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문교부의 인식 전환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처음에는 10% 정도의 지원으로 시작하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궁극적으로 이 비율은 60~70% 수준으로 높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산업 사회를 주도해 가고 세계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데 있어서 여·야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국·공·사립의 입장이 다를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二重構造를 허물고 대학교육의 質을 높이는 데 있어서 投資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